



한국근현대사에서 ‘국제정세와 3·1운동’ 이해

신주백

1. 한국근현대사에서 3·1운동

1876년 개항은 조선이란 신분제 국가가 그때부터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항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 가는 시작점이었다.

조선이 맞이한 새로운 전환점은 외부에서 주어진 측면이 강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조선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근현대 150여 년의 역사에서 주체의 주도적 의지와 계획보다 외적 규정력 때문에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진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한국사회는 그때마다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

가령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의사를 묻개고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과 열강에 짓밟힌 역사적 사건의 결과,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한 국제 지위는 열강에 의해 보장되었고 그것을 상징하는 기구로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반(半)식민지나 마찬가지였고, 일본이 밀어붙인 한국병합으로 멸망하였다. 여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열강은 없었으며, 이로써 열강 사이에 벌어진 식민지 영토 획득 경쟁이란 ‘그레이트 게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인 1943년 연합국은 신탁통치를 거쳐 독립한다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며 식민지 조선의 즉각 독립을 부정했으며, 미·영·소는 일제 패망 직전 미국 측이 제안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을 각각 점령하고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신탁통치와 분할점령은 한반도에서 분단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질주해야만 하는 역사적 현실에 내몰린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한국근현대사가 열강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을 당한 역사였다고만 말할 수 없다. 한국인이라는 주체가 적극적 능동성을 발휘함으로써 역사적 전환을 만든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전후로 한국사회의 획을 그은 경험은 예를 들어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화운동 때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인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끈 거대한 진보의 본보기였다. 같은 맥락에서 1919년의 3·1운동도 볼 수 있다.

한국근대사에서 커다란 이정표를 만든 3·1운동은 한국인 사회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음을 만천하에 폭발적으로 알렸다. 한국인의 근대를 압축적으로 표출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청년학생과 여성이 운동 과정에서 스스로 활약하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사서삼경이란 기본 텍스트

트를 바탕으로 쌓아 온 유학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 대신, 서구적 지식체계와 가치관을 기본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한국인의 진로를 고민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등장했음을 본격적으로 알린 사건이 3·1운동이었다. 문자로 한국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피지배층 내지는 민중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조합과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일회성 또는 국지적인 한계를 벗어나 일상적으로 그러면서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도 3·1운동이었다.

새로운 주체들은 독립 이후의 신한(新韓)에서 절대군주제를 다시 세우는 꿈을 꾸지 않았다. 민(民)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를 세워야겠다고 상상하였다. 새로운 주체들의 활동과 존재적 의미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가치관은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3·1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달리 보면 한국사회에서 대중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역사적 체험 공간이 3·1운동이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위대한 선택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임을 체험한 사건이 3·1운동이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32년 만에 발행하는 첫 번째 학술연구총서의 주제로 3·1운동의 역사를 선택한 이유가 주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내포한 의미에 주목한 데 있다.

2. 국제정세와 3·1운동

우리 민족에게 전환기적 체험 공간이었던 3·1운동은 한국인 사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그렇다고 외적 규정력, 달리 말하면 운동의 대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주체의 능동적인 선택도 외

적 환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역사는 없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안과 밖을 함께 보지 못하면 한국근현대사의 화수분인 3·1운동의 역사적 함의를 제대로 드러내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3·1운동의 외적 규정력, 달리 말하면 3·1운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동향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무엇일까?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란 전대미문의 세계적 사건을 빼고 3·1운동과 연관된 국제정세를 설명할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전쟁이었다. 유럽 인구의 1/4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였고,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제국의 식민지들이 직간접 형태로 모두 전쟁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전쟁의 양상에서 전방과 후방의 구분을 무의하게 만들 만큼 국민을 총동원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을 최초의 총력전이었다고까지 말한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도 회의의 규모면에서 보면 역대급일 수밖에 없었다. 강화회의의 시대정신이었던 민족자결주의는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미 피식민지인들의 저항 정신을 자극하는 보편 담론처럼 유통되며 열강으로 하여금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해체와 거기에 속했던 국가와 민족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그 단적인 보기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자극한 측면에서 보면 1917년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혁명을 빼놓고 세계사를 말하고 3·1운동을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에 등장한 국가는 그때까지 국가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노동자 농민 병사의 소비에트 형태를 취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이 국가의 등장 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 불세비키가 만든 국가의 민족정책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저항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중일에도 각각 공산당이 등장했고, 그 존재로 인해 세 곳의 정치와 사회 또한 많이 바뀔 정도였다. 실제 1920년대 한국인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주체와 그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빼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과 불세비키혁명을 염두에 두고 세계사를 근대와 현대로 가르고 있다.

한국근대사의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는 3·1운동 역시 이러한 국제정세의 자장 안에 있었던 반식민지 민족혁명운동이었다. 3·1운동의 주체는 세계대전의 마무리 과정과 민족자결주의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1917년의 불세비키 사회주의혁명이 드러낸 새로운 비전을 어느 정도라도 납득하고 만세시위를 기획하였다. 그들이 만세시위를 벌이고 있던 그 시점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만세시위가 5월까지 진행되었는데, 강화회의는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열렸다. 3·1운동에 참가한 주체가 그때까지 열린 국제회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후(戰後) 처리 회의를 의식하며 발언하고 활동하는 움직임은 당연한 대응이다. 3·1운동은 전후 세계에서 처음 일어난 반식민지 민족혁명운동이었다. 그것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식민지 민족혁명운동이었으니 민족자결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주체적으로 적극 해석한 저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운동 주체의 능동적 선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3·1운동의 와중에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협회’나 ‘연맹’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 ‘정부’ 형태의 항일운동기관을 결성한 움직임은 국제회의와 시대정신에 부응한 당연한 대응이었다. 약속이나 한 듯 여러 지역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흐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바로 이 점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간하는 첫 번째 학술연구총서의 주제를 「3·1운동과 국제사회」로 정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획은 수많은 연구가 발표된 정치적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관계사나 관련 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사상사의 영역을 주목하지 않았다. 민족자결주의가 한국 독립운동과 한반도문제에 적용되었느냐의 여부, 그것을 한국인이 인지했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에 제1권은 국제정세에 대한 해외 한인사회의 능동적 대응, 그리고 이러한 정세와 대응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전후처리를 주도한 윌슨 미국 대통령은 파리강화회의의 합의안을 미국 의회에서 비준받지 못하였다. 회의에서 동아시아 관련 핵심 의제는 중국문제였는데, 4월에 열린 회의 때 일본의 중국 권익을 열강이 인정한 그 순간, 중국에서는 3·1운동의 영향도 받은 5·4운동이 일어났다. 국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중국 대표는 합의안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파리강화회의는 동아시아에서의 전후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와 연동하여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던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를 처리하는 문제 또한 연합국 사이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동아시아의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모인 회의가 1921년 11월부터 열린 워싱턴회의였다.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는 워싱턴회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러시아 주도로 여기에 맞대응하여 열린 회의가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였다. 이 책의 대상 시기를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1922년 1월에 끝난 미국 워싱턴회의와 2월에 끝난 러시아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까지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에서 열린 두 국제회의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제정세의 단기적인 긴박성에 주목하기보다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대

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운동의 양상 또한 1922년 초를 고비로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차이와 분화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두 운동 계열 내부에서도 각각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운동 계열이 함께 그것을 확인한 처음이자 마지막 회합이 1923년 국민대표회의였다.

3. 전체 구성과 논문 소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인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체의 능동적 대응을 이해하려는 이번 기획은 크게 3부 곧, ‘제1부 3·1운동 전후 국제회의와 한국독립운동’, ‘제2부 국제정세의 변동과 해외 한인의 3·1운동’, ‘제3부 타자의 눈으로 바라본 3·1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주체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관한 해명은 다음 학술연구총서를 통해 지방사 맥락에서 시도하려 한다.

이번 기획의 기반은 3·1운동 100주년과 광복절을 기념하여 우리 기념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있다. 국제학술회의는 ‘3·1운동 전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독립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3·1운동’, ‘국제사회는 3·1운동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모두 16편의 글이 세상에 나왔지만, 학술회의 기획 때부터 단행본 간행을 염두에 둔 기획이 아니었으므로, 책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홉 편 가운데 세 편을 새로 보충하였다. 독립기념관이 주관한 연구사업의 결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을 위해 흔쾌히 동참해 준 전상숙, 홍응호, 윤소영 선생에게 특히 감사하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연구총서로서의 기획의도와 제1권의 목적

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애초의 구상에 근접한 연구와 전체적인 분량을 고려하여 각 부에 세 편의 논문씩 수록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1부에 전상숙, 홍선표, 반병률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전상숙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살펴보고 민족자결주의문제를 짚어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는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여러 민족의 독립에 대한 기대와 열망 속에 열렸다. 피압박 민족은 시대정신이었던 윌슨의 14개조선언 중 민족자결 내용에서 독립의 서광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혁명의 성공으로 비도덕적으로 여겨진 전쟁목적에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을 선언해 도덕성을 입히고자 한 선언이었다.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선언은 이상적이었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얹힌 비밀외교로 식민지 약소민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홍선표는 미주의 한인 대표자가 참가한 1917, 1918년의 소약국민동맹 회의를 규명하였다. 뉴욕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참가한 22~24개 약소국 민족대표는 전쟁의 종결 직후 자신들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한인 대표자들의 회의 참가는 미주 한인들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과 식견, 그리고 내적 능력을 배양시켰다. 나아가 제일 한인 유학생의 2·8독립운동과 국내 3·1운동으로 이어진 외교 독립운동으로서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의 선구자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반병률은 원동혁명단체대표회가 1921년 8월 국제공산당이 워싱턴회의에 대항하여 대회 소집을 제창한 이래 두 차례 연기되고 개최장소가 변경된 이유와 배경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대회 명칭들의 근거를 비교, 분석하였고, 당시 한국독립운동세력들이 당면하고 있던 제문

제 즉, 통일적 민족혁명기관의 수립문제, 모스크바자금 문제나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분파투쟁 등이 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대회 후 어떻게 귀결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제2부에 정병준, 윤소영, 이장규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정병준은 1918년 11월 창당된 신한청년당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국내외 한국인이 파리강화회의와 전후체제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내·일본·만주·연해주 등에 당원들을 파견해 파리강화회의 파견대표를 후원하기 위한 선전 및 자금모금활동을 벌임으로써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촉발될 수 있도록 했음을 해명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청년당이 이후 초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중심조직이자 지지조직으로 임시정부가 상해에 안착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윤소영은 2·8독립운동이 ‘일손의 민족자결주의에 부화뇌동하여 젊은 혈기로’ 결행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전제정치를 넘어 자유와 정의,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려는 이상을 품고 결행된 독립운동이었다는데 주목하였다. 유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문명국’임을 자임하면서도 천황제 이데올로기하에서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었던 일본의 위선적인 문명 상황의 허점을 찌르듯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일본제국의회에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2·8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장규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우사 김규식이 이끌던 ‘한국대표단’이 열악한 조건하에도 불구하고 통신전을 발행하여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물론 여러 언론인, 각국 정부에 일일이 송부해 한국의 실정을 알렸음을 해명하였다. 한국대표단은 한국과 같은 형편의 약소국가

지도자들과 언론인, 사회 각계의 명사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은 방대한 부수의 청원서와 비망록을 제작하였고 서신과 함께 각처에 배포하여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또한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 결과, 루체른 사회주의자 대회에서 한국독립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제3부에 황기우, 홍웅호, 윤소영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황기우는 베르사이유강화조약이 유럽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독일이 획득하고자 했던 다양한 분야의 이권을 위협했다는데 주목하고 독일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독일 정부는 교주만에 대한 지배권이 일본의 침략으로 사실상 상실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일어난 3·1운동을 주목하였다. 독일 정부는 3·1운동에서 교주만에 대한 지배권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정당성을 찾았다.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동안 축적했던 문화와 경제적 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독일 정부는 3·1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제국의 호전적 모습을 국제적으로 선전하면서 교주만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꺾으려 하였다. 그래서 3·1운동을 조선민족의 자결권 수호를 위한 평화롭고 정당한 대중운동으로 간주하고 지지하였다.

홍웅호는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였던 류트쉬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3·1운동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파악했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류트쉬가 보기에 3·1운동의 원인은 겉으로 들어난 고종의 사망과 장례식이 아니라, 일본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였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한 주도세력은 종교계, 특히 천도교와 기독교였다.

윤소영은 3·1운동에 대한 일본 신문의 논조를 손병희와 천도교 관

런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신문은 처음에는 3·1운동이 한국인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오해하여 일으켰으며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미신으로 속인 전근대적인 '사이비 종교단체'인 천도교가 획책했다고 깎아내렸다. 그렇지만 운동이 조직적·평화적·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3·1운동의 중심에 있는 손병희와 천도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신문은 손병희가 단지 종교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혁명을 달성하려는 정치가라고 파악하였다. 특히 요시노 사쿠조는 대한제국이 '망국 조선'이었다면 천도교와 손병희가 '흥국 조선'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이끄는 3·1운동은 한국의 새로운 청년정신에 의해 견인되는 움직임이었다.